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14
----------	-------

발의연월일 : 2023. 5. 4.

발 의 자 : 한기호 · 이양수 · 노용호
권성동 · 유상범 · 김희곤
이철규 · 이현승 · 유의동
지성호 · 성일종 · 송기현
엄태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올해 6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조문이 400개 조항이 넘고, 2006년 법 제정 당시에도 300여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가결 되었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3개 조항에 불과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국방 부문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군 급식 공급지원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하여,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지정된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단순처리품 포함)을 조달하는 경우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 구매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품질 좋은 농·축·수산물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민간인통제선 조정 요청)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각각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의 국방부심의위원회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연구원

④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용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해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2.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한 경우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5.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29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 등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

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③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또는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미활용 군용지 등 활용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활용 군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1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시·군 또는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

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p> <p><u><신 설></u></p>	<p>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p> <p><u>제24조(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 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 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 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 구 매할 수 있다.</u></p> <p><u>② 국방부장관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지정된 접경지역 군 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 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단 순처리품 포함)을 조달하는 경 우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u></p>

<신 설>

<신 설>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 구매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품질 좋은 농·축·수산물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민간인통제선 조정 요청)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각각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의 국방부심의위원회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

<신 설>

원 · 연구원

④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용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신 설>

물」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해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2.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한 경우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

<신 설>

수가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5.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29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를」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 등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③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또는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신 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미활용 군용지 등 활용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활용 군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1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시·군 또는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

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